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¹⁾

최장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cho.j@kiep.go.kr

I. 머리말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국내에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 북한의 관세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이 관세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북한이 어떤 비관세 장벽을 운영하고 있고,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이 가진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법·제도의 구조 및 특징을 밝히고, 차후 북한이 대외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할 때 무역 관련 법·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먼저 북한에서 법이 갖는 지위를 살피고, 다음으로 북한의 무역법과 세관법, 관세율 편람에 나타난 법·제도 제정 목적, 주요 내용을 살폈다.

둘째, 북한의 관세율 체계를 분석하여 산업 보호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또 관세의 재정 기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다. 북한 관세율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북한의 산업 정책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현재의 관세율 수준이 산업별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살폈다. 또한 관세 재정 수입에 대한 기여율도 분석하였다.

셋째, 북한의 비관세 제도를 분석하였다. 국제기준에서 규정하는 비관세 장벽의 의미를 살펴본 뒤, 북한 비관세장벽의 주요 쟁점을 규명하면서 주요한 특징을 규명하였다.

1) 본고는 2023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최장호(PM) · 김다을 · 이정균 · 최유정이 수행한 동일한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북한이 국제시장에 편입하려 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관세율표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북한의 관세율표는 2005년에 처음 발간되었으며,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 수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이 발간한 관세율표에 대한 분석은 현재 북한의 관세에 대한 인식, 역할 규정, 정책적인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II. 북한의 법치주의와 무역 제도의 목적

법은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법치주의가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이유는 법의 명확성을 통해 행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에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수출입의 불확실성을 줄여 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한에서 관세와 무역제도를 규정하는 법·제도로는 무역법, 세관법, 관세율 편람 등이 있는데, 이들의 제정 및 편찬 시기는 우리에게 비해 매우 늦다. 북한의 무역법과 세관법의 제정 연도는 각각 1997년과 1983년이며,²⁾ 관세율 편람의 편찬 시기는 2005년³⁾이다.

북한에서 관세 및 무역관련 법의 제정이 늦은 것은 법의 역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제도 자체의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국가와 국가에서 파생한 법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보며,⁴⁾ 북한에서는 헌법을 최고의 권위를 갖는 당 규약의 하위 규범으로 본다. 당 규약만으로는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었기에 보조적인 기능으로 법을 제정하였다.⁵⁾

사회주의 법치국가란 ‘당의 영도 아래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사회주의법을 바탕으로 사회 및 국가를 관리하는 국가’를 칭한다.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에서 법은 국가권력과 통치 집단의 전횡 및 권력 사유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rule of law)을 하는데 반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가권력과 통치 집단은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국가와 인민들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역할(rule by law)을

2) 국경원, 『2022년 북한법령집 하권』, p.1044, p.1056.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총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세율편람』, 머리말, 2005.

4) 서재진,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비교연구: 체제형성에 미친 영향과 개혁·개방의 논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2, p.18.

5) 강해석, 『사회주의 법치국가론과 김정은 시대의 통치전략: 북한식 법치의 내용과 특징』,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1호, 2022, p.277.

한다.⁶⁾

무역법 제정의 목적은 ‘무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⁷⁾이다.

북한 세관법의 목적은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화물과 임시 반·출입물품, 운수 수단,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 기타 물품에 대한 통관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며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로 되어있다. 북한의 세관법이 ‘국가 안전 보장과 자립적 민족경제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남한은 ‘관세수입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수출입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순환구조를 깨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세를 편람의 편찬 목적은 ‘나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관법에서와 같이 경제를 보호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관세 재정 수입의 확보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북한의 세관에서 수입한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에는 관세, 선박톤세, 세관요금⁸⁾이 있으며, 그리고 법령집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수입하는 품목이 전시물자⁹⁾인 경우 그 일부를 전시비축물자로 헌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조세 성격의 세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이다. 먼저 관세는 수출입 화물과 그에 해당하는 물품에 부과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⁹⁾ 다만, 북한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군과 당이 수입하는 화물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이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법령집을 검토하고 북한의 대외경제성과 특수기관에서 각각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2명¹⁰⁾을 면담한 결과,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 화물이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외화로 납부해야 한다.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요금, 전시비축물자 등은 모두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며, 특히 외화로 납부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민간이 가진 외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6) 강혜석, 「사회주의 법치국가론과 김정은 시대의 통치전략: 북한식 법치의 내용과 특징」,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1호, 2022, pp.279~280.

7)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 2022, p.1058.

8) 주로 쌀, 옥수수, 철강, 시멘트, 유류, 군복류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9)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 2022, p.1064.

10) 전문가 간담회(2023. 6. 28; 2023. 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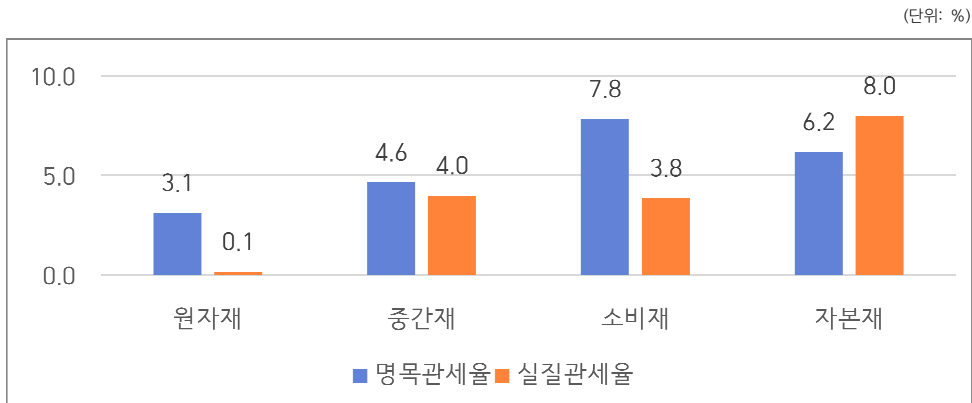
III. 북한 관세율의 구조와 역할

외화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북한의 명목관세율은 평균 5.5%, 실질관세율은 평균 4.6%이다. 북한의 내화 기본관세율은 명목 기준 평균 4.9%, 실질 기준 평균 4.2%로 외화 기본관세율보다 더 낮다. 2005년 약 150개국의 WTO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평균 명목관세율 수준은 8.1%로 북한의 명목관세율 5.5%보다 높다.

산업화 및 시장개방 초기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사관세구조를 채택한다. 경사관세구조란 원자재에서 최종재까지 가공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원자재 수입을 촉진하고 최종재 수입은 억제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

명목관세율은 원자재 3.1%, 중간재 4.6%, 소비재와 자본재는 각각 7.8%, 6.2%로 원자재에서 최종재로 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경사관세구조를 보였다. 실질관세율은 명목관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데 원자재의 실질관세율은 0.1%로 무관세에 가까웠고, 중간재와 소비재 실질관세율이 각각 4.0%, 3.8%로 소비재 실질관세율이 소폭 낮게 나타났다. 최종재 중 자본재의 실질관세율은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북한의 가공 단계별 관세율(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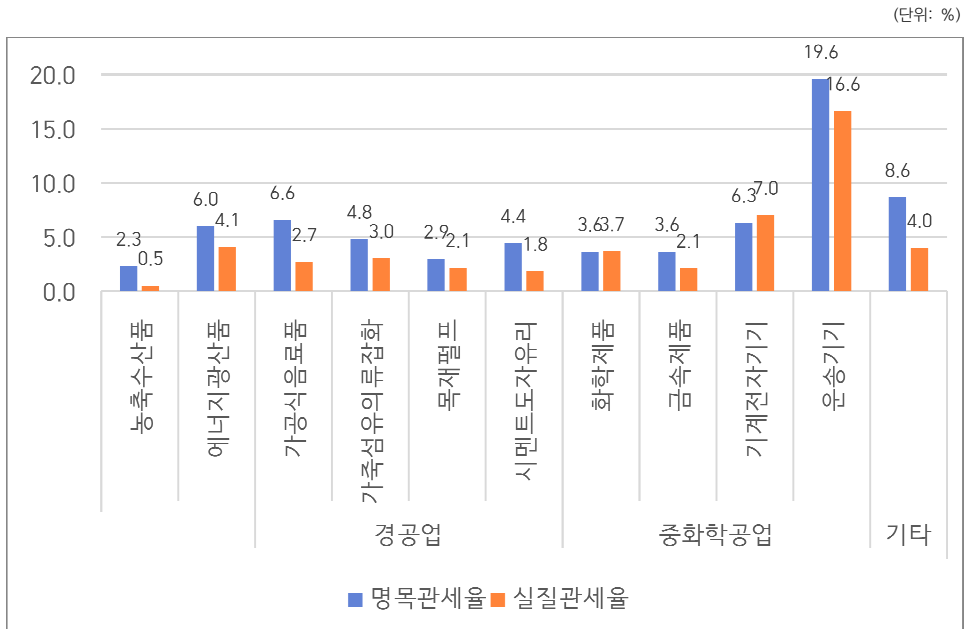
자료: 북한 관세율 편람 기반 저자 작성.

품목별로 평균 명목관세율과 실질관세율을 계산하면 [그림 2]와 같다. 명목관세율 기준 운송기기의 관세율이 약 20%로 다른 품목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계전자기기, 가공식품료품, 에너지광산품에도 6%가량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농축수산물이나 목재펠

프, 화학제품과 금속제품에는 2~3%의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실질관세율은 마찬가지로 운송기기가 16.6%로 모든 품목 중 가장 높으며 기계전자기기도 7%로 명목관세율과 실질관세율이 모두 높은 편에 속했다. 특히 기계전자기기는 실질관세율이 명목관세율보다 소폭 높인데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기계전자기기 제품이 국내 생산 역량의 부족으로 고관세를 지불하고 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에너지광산품 실질관세율이 4.1%, 화학제품 실질관세율이 3.7%로 뒤를 이었으나 높은 수준은 아니며 그 외 품목은 3% 이하로 더 낮은 실질관세율을 보였다.

[그림 2] 북한의 품목별 관세율 (2005년)



자료: 북한 관세율 편람 기반 저자 작성.

2005년 기준 북한 관세율 구조의 산업별 특징은 ① 농축수산물에 대한 낮은 관세율, ② 식품 가공 및 섬유류제품에 대한 경사관세, ③ 운송기기 및 기계전자기기 중간재에 대한 고관세, ④ 금속·화학제품에 대한 저관세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산업화 초기 국가의 일반적 산업 발전 단계상의 관세구조에 부합할지라도 관세율의 수준은 매우 낮아 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산업 보호 효과 외에도 관세는 재정수입 기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세수가 풍부하지 않은 국가일수록 관세가 재정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총 재정수입에서 관세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12%가량을 차지하다가 1990년대 이르러서야 7.5%로 관세수입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¹¹⁾ 2021년 기준 3.6%까지 감소하였다.¹²⁾

2010년대 초중반 기준 관세가 북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하였다. 관세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재정수입에 대한 기여다. 북한은 과도하게 낮은 관세율 수준으로 재정 측면에서도 관세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북한의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의 총칭을 의미한다.¹³⁾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무역제도 중 상당수가 국제무역 질서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관세장벽 요소 중 정책적 요소로 첫 번째는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가의 관리·통제 대상이며 국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경제 부문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목표이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강조는 대외경제 관계를 최소한의 필요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으로만 인식하게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무역제도에서는 수출입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보조적인 역할로 국한시키고, 자국인과 자국 법인에 비해 외국인과 외국 법인을 차별하는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셋째는 당-국가 체제의 강화이다. 당 사업체계의 수립과 참신한 당 사업 방법의 확립을 요구하는 한편, 당적 지도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대외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무역 정책이나 제도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장벽의 요소들은 자국 산업 보호 역할보다는 중앙 집권적 무역제도 확립,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자본주의 문화 유입 통제 등 체제의 안정적 유지 목적과 이를 위한 국가계획의 관리·통제 역할에 치중되어 있다. 북한의 무역 관련 제도 간 정합성과 불명확한 위계질서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무역관련 제도에서

11) 통계청, 「국세통계」, 「세입 및 세출 현황」(1994~200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01&conn_path=I3_1966~199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TX_13301_A065&conn_path=I3, 접속일: 2023. 9. 7).

12) 통계청, 「국세통계」,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1_000&conn_path=I3, 접속일: 2023. 9. 7),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 관세총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4&tblId=DT_134007_2021_B002&conn_path=I3, 접속일: 2023. 9. 7) 기반 저자 계산.

1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담당-비관세장벽 정보(<https://www.fta.go.kr/main/support/nontarif/1>, 접속일: 2023. 4. 6).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영무역기업제, 지정 무역제, 무역업 허가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무역 거래는 무역거래 취득 조건을 갖추고 중앙 무역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 할 수 있다. 또한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업종과 지표에 맞게 수출입 수속과 무역 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승인된 업종과 지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받고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을 정확히 맺고 이행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 과정에서 국가계획에 따른 승인 과정은 모든 무역 절차에 국가가 개입하는 통제 정책에 해당하며, 이는 모두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무역계약, 무역가격, 수출입 상품 수량, 운송, 대금 결제 등 모든 무역 절차는 국가계획과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무역 상대국의 거래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의 계약서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북한 무역법의 수출입품의 제한, 금지, 반·출입 중지 규정

관련항목	조 항	내 용
수출입 제한	제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수요보장과 자연부원,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 • 인민경제발전예 지장을 줄 수 있을 경우 • 국제수지와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출입 금지	제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경우 •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 경제적 실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경우 •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출입품의 반·출입 중지	제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무역정책에 어긋나게 수출입 지표를 선정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무역계획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무역계약심의, 가격 및 반·출입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 비법적으로 상품을 원천 동원한 경우 • 그밖에 무역 관련 법규에 어긋나게 수출입을 하는 경우

WTO, OECD, UNCTAD 등 국제기구의 비관세장벽 분류를 북한의 무역제도에 적용해 보면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북한이 국제사회 편입을 시도할 때, 북한의 비관세장벽 철폐는 가장 먼저 논의될 사안이 될 것이다.

V. 북한 무역제도 개편의 방향성

북한의 무역제도 개편의 원칙은 관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역제도 개편은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가면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무역 규제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세장벽을 높여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강한 비관세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에 있어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철폐해야 한다. 복잡한 수출입 절차와 수출입 규제를 개편하여 단순화하고 일원화하여야 한다. 무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야 하며, 국가 계획에 의한 무역은 공공 기업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수출입품의 제한, 금지, 반·출입 중지 규정을 국제 관련에 맞게 재분류하여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문화 유입 통제를 위한 무역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무역 자격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 민간 기업과 단체, 개인은 자유롭게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의 법제에서는 외국인은 무역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고쳐가야 한다. 수출입 과정에 있어 외국인과 내국민의 무역 참여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원칙이 재고려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수입대체나 국산화를 통해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고 과도한 국부 유출은 막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처럼 대외 무역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산업과 제조업을 보완하는 차원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무역 정책이다. 수출입을 활성화하여 국제 분업 체계에 편입될 필요가 있는데, 국제 분업 체계, 즉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되어야 외국인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 고유의 물류(수송 및 선·하적 검사), 규격 및 검사제도, 무역 대금의 결제 방식을 모두 국제 표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3통(통관, 통신, 통행)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해 가야 한다. 물론 북한은 이미 북한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물류, 규격 및 검사제도, 대금 결제 방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방식은 지나치게 폐쇄적인 구조를 하고 있어 외부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려 철폐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상된 관세율은 세계자유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가입 협상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베트남은 대외개방 과정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관세를 인상하였다. 현재 북한의 관세율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수준으로

높지도 않고, 또 정책에 맞추어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대외 개방 초기의 관세율은 수입대체·수출 지향의 무역 정책을 펴는 데 적합하도록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화 개편 조치가 이루어지면 다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국제기준과 이질성이 커 개혁개방 시기 동안 북한경제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인 충격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북한경제 국제기준 수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양측의 경제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협상 상대가 필요하다. 이런점에서 북한의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 사례처럼 작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확장해갈 필요성이 있다. 베트남은 ASEAN 가입과 함께 AFTA를 자동적으로 체결하여 WTO에 가입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CEPA 체결 → 남북중일 무역협정 체결 →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의 순서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단계적인 북한의 대외 개방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중일 무역협정은 참여국들이 북한 주변국으로서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유교문화권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북한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¹⁴⁾

14) 최장호·최유정·임소정·이효영,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152, p.157.

참고문헌

- 강혜석, 「‘사회주의 법치국가’론과 김정은 시대의 통치전략: 북한식 법치의 내용과 특징」,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1호, 2022.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 2022.
- 북한 관세율 편람.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마당-비관세장벽 정보』.
- 서재진,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비교연구: 체제형성에 미친 영향과 개혁·개방의 논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2, p.18.
- 정원, 『2022년 북한법령집(하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총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세율편람』, 2005.
- 최장호·김다울·이정균·최유정,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2023.
- 최장호·최유정·임소정·이효영,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통계청, 『국세통계』, 각년도.